

— 2015년 정치위원회 토론회 —

노동자정치세력화와 노동진보진영의 ‘2016 총선대응

■일시: 2015년 10월 8일(목) 16시

■장소: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순 서 □

□ 개 회

□ 민중의례

□ 한상균 위원장 인사. 모두발언

□ 발제 / 토론

- 노동당 최승현 부대표
- 노동정치연대 이병렬 집행위원
-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백종성 현장정치특별위원장
- 진보결집+ 권태훈 공동대표
- 정의당 김형탁 부대표
- 공안탄압대책위 장원섭 집행위원장

□ 폐 회 / 뒤풀이

▣ 발 제 ▣

[발제 1] 최승현 노동당 부대표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당면한 노동개약에 맞선 투쟁을 돌파할 때 이뤄질 수 있다.

I. 민주노총의 1기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평가

민주노총의 1기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패의 원인을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2008년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분당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력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미래를 ‘통합’과 ‘통합된 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에서 찾습니다.

그와 반면에 외환위기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포괄적 사회대안이 미흡했고, 신자유주의가 양산한 비정규불안정노동자를 정치의 주체로 조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세력은 새로운 주체의 형성 전략 즉 전체 노동자 계급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조직화 전략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기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그 해법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1기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평가는 오늘의 토론에서도 매우 중요한 하나의 주제가 됩니다.

1. 1기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한계 - 배타적 지지 방침

민주노총 2014년 제2기 노동자정치세력화 길찾기 연속토론회-첫번째에서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실패원인을 진단하며 배타적 지지를 언급합니다. “배타적 지지는 사회민주주의 노동운동의 ‘양 날개론’ 중 최악의 형태. ‘양 날개론’은 노동운동의 역할분담론이나 경제주의

노동운동을 야기한 구조적 원인 중 하나. 노조는 자신의 정치활동을 방기했으며 당은 계급 대중의 정치적 조직화를 노조에 맡겨버리는 문제. 특히 배타적 지지는 각 조직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상호 이전함으로써 악순환을 가져오게 됨. 예컨대 민주노총 내부의 정파 갈등은 배타적 지지를 통해 당으로 이전되었고, 반대로 당 내의 정치적 갈등은 곧 바로 노동대중을 균열시키고 활동을 무력화시킴. 민주노총의 정파연합에 의한 패권주의는 당으로 확산되었고 곧 다시 반대로 역수입되어옴. 특히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의 조직 현실은 당 활동에 그대로 투영되었고 노동정당마저 미조직 비정규노동자를 배제하는 현실적 결과를 초래하였음.”이라고 밝히며 배타적 지지라는 정치방침이 노동자 정치세력화 실패의 구조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노동자 정당이나 진보정당에 노동자 대중이 대거 참여하여 정당의 가장 넓은 대중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동자 대중이 정당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노동자가 능동적인 정치주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민주노총 내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배타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노동자의 주체적인 정치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며 이런 관료적인 방식의 정치세력화라는 필연적으로 정치 주체가 주변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2. 1기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한계 - 새로운 노동체제의 대응전략 부재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외환위기 이후 등장한 한국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의 양산을 막아내지도 못했고, 노동사회를 재구성하는 전략을 갖추지도 못한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비정규직사업은 전체 사업에서 늘 주변적이었습니다. 당연히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율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결국 민주노총의 전체 노동자 계급의 대표성은 약화되었습니다. 어쩌면 약화된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한 측면에서 무분별한 야권연대, 민주연립정부 노선 등으로 해결하려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수정당에 노동자 정치를 위탁한다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이는 우리가 염원했던 노동자 정치세력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II. 2기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방향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노동자가 정치적 주체로 서는 일, 정치적 노동자계급 형성입니다. 정치적 노동자계급의 형성은 단순히 정당정치의 노동자 대중기반을 넓히는 일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1기가 실패한 지금 우리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현 시기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목표는 당연한 정세인식을 토대로 합니다. 신자유주의(금융자본주의, 금융수탈체제)를 극복하고, 박근혜 정권의 노동재앙에 맞서 투쟁하기 위한 정치적 주체로서 노동자 대중의 결집이 바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일 것입니다.

따라서 2기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향은 1)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포괄적인 사회대안을 중심으로 2) 임금저하, 노동조건 악화, 고용불안, 노동법 개악의 원인을 제공하는 노동체제와 정권에 대한 정치적 투쟁을 통해 3) 노동자계급을 정치적으로 재형성하는 것입니다.

III. 민주노총은 2016년 총선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 현 정세와 2기 노동자 정치세력화

투쟁으로 돌파하자.

민주노총의 당면과제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제대로 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민주노총은 노동개악에 맞서는 전체 노동자 계급 투쟁의 전선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민주노총은 96~97년 총파업과 같은 정치 투쟁을 11월에 조직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진보정치 세력도 이 투쟁 전선에 함께 해야 합니다. 특히 보수정당간의 적당한 합의로 노동자 민중을 기만하는 정치 행태에 대해 진보정치세력이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투쟁하는 노동자, 정당, 세력이 2기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주체

민주노총의 노동개악 저지에 맞서는 투쟁에 함께하는 노동자, 정당, 세력이 2기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2기 노동자 정치세력화

는 현 정세에 맞서는 투쟁과 새로운 정치 주체의 형성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와는 무관한 '묻지마 통합 혹은 결집' 논의는 1기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실패를 반복하자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2. 민주노총의 2016년 총선 방침 방향

현재의 노동개악 투쟁의 연장선, 장기적으로는 2기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향에서 민주노총의 2016년 총선 방침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전체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2016년 총선 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1) 정리해고 투쟁의 상징인 인물과 지역 발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투쟁과 평택에서의 선거 투쟁은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2)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인 인물과 지역,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의 활동과 국민투표의 성과를 이어 총선 투쟁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3) 비정규불안정노동자 조직화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조직

청년실업, 알바노동자와 같이 민주노조운동 외곽에 있지만 비정규불안정노동자의 투쟁을 상징하는 인물과 지역 발굴을 통해 새로운 주체 형성 전략으로 총선 투쟁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4) 전통적인 노동 강세 지역

5) 각 부문과의 결합력을 높이는 총선 투쟁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이 2016년 총선 방침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진보정당에서 출마한 후보를 민주노총 지지후보로 추진하는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후보의 선출방식도 민주노총과 정당 및 제 세력, 지역의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대중적 방식으로 기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IV. 노동당의 2016년 총선대응방침

1. 현 시기 노동당의 정치 활동 방향

앞서 밝히고 있듯이 현 시기는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 시도를 저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노동당은 민주노총과 조합원들과 비정규불안정노동자들과 함께 거리에서 싸우겠습니다. 그것이 진보정치와 진보정당에 대한 노동자 대중의 불신을 회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2.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 극복을 위한 전략의제 형성

노동당은 총선 전략의제로 노동의제(최저임금1만원, 노동시간단축, 기본소득)와 정치개혁의제를 정했으며, 이는 7, 8, 9, 10월 박근혜정권이 노동개악과 정치개악을 추진하는 것과 명확한 대립지점이 되는 의제를 선정한 것입니다. 10월부터 11월 민주노총의 민중총궐기에 이르는 때에 전국순회와 거점농성 등 전 당력을 동원하여 전사회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투쟁을 펼쳐갈 계획입니다.

3. 노동당 2016년 총선 방향

노동당은 2016년 총선은 앞서 밝힌 2기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방향의 측면에서 기획될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노동체제를 극복할 사회대안을 중심으로 비정규불안정노동자가 새로운 정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노동개악 저지 투쟁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V. 맺으며

노동당은 민주노총이 노동개악에 맞선 투쟁을 선도하면서 제대로 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이뤄내기를 바랍니다. 노동당도 이러한 투쟁에 함께 나설 것이며, 함께 신자유주의에 대한 사회대안을 만들고 비정규 불안정노동자를 새로운 주체로 세워내는 일에 함께할 것입니다. 2기 노동자 정치세력화 이제 제대로 시작합시다.

[발제 2] 이병렬 노동정치연대 집행위원

노동자 정치세력화, 총선대응

1. 진보정치 결집을 통한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 현황

1) 노동정치 과정(민주노총 중심으로)

- 1995년 : 민주노총 창립과 산별노조 건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독자적 정치세력화 시작
- 2000년 : 민주노동당 창당과 배타적 지지방침 확정
- 2008년 : 민주노동당 분열과 진보신당 창당
복수의 진보정당 시대 - 배타적 지지방침 논란 시작
- 2012년 : 통합진보당 창당
배타적지지 논란 가속화, 선거방침으로 통진당지지(비례대표에 한함)
- 2012년 : 통합진보당 분열과 배타적지지방침 철회
- 2014년 : 지방선거에서 복수의 정당과 노동정치단체 후보지지(4+2)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노동정치연대, 계급정당추진위
- 2015년 현재, 민주노총 정치방침 없음, 통일된 정치방침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

2) 진보결집을 통한 새로운 통합 진보정당 건설 경과

- 2013년 11월 노동정치조직인 노동정치연대 출범
- 2014년 1월 민주노총, 정의당, 노동당, 진보교연 등에 진보재편을 통한 통합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논의 제안
- 2014년 2월 진보재편을 위한 혁신회의(진보혁신회의) 준비위 결성
- 2014년 9월 진보혁신회의 중단
- 2014년 12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105인 선언(국민모임)
- 2015년 3월 국민모임 제안으로 국민모임, 정의당,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대표와 집행책임자 8인 비공식 회동
4.29 보궐선거 공동대응 등을 위해 4자의 집행책임자들로 구성되는 정무협의회 구성
- 2015년 4월 보궐선거 공동대응 무산됐으나 일부 선거연대 합의(서울 관악을에서 국민모임과 노동당 후보단일화-선거연대 합의, 정의당 후보사퇴)

- 2015년 6월 4일 정의당, 노동당,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명의로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공동선언 진행
- 2015년 9월 2일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정의당, 진보결집+ 신4자선언

2. 지난 노동자 정치세력화 관련 약평

- 역사적인 민주노총 창립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과제 천명
- 97년 노동법 총파업이후 시작된 본격적인 정치세력화
국민승리21 --> 민주노총 위원장 대선출마(97년) --> 민주노동당 창당(2000년)
- 2011년까지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지지
- 2004년 총선으로 10명의 국회의원 배출이후 지속된 논쟁
 - ▶ 당에게 민주노총은 무엇인가?
 - ▶ 노조는 당에서 어떤 역할을 했어야 했는가?
몸대주고, 돈대주고, 대리정치
 - ▶ 물적, 인적토대 구축 실패(당원 조합원의 5%, 당 인적구성 노조활동가 소수)
 - ▶ 정파간 이해다툼에 휘둘린 노조 --> 노조중심으로 사고하기 보다 정파의 이해에 따라 분열

3. 노동정치 방향

- 1) 노동조합과 정당과의 관계정립 필요(방식의 문제)
 - 노동조합운동과 독자적인 정치세력화
→ 노동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 운동(유럽, 중남미)
 - 노동조합과 자유주의정당과의 선거연합
→ 야당과의 선거연대 정책연합(미국, 일본)
- 2) 우리가 가야할 길
 - 여전히 독자적 정치세력화가 가야할 길
 -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의 양날개론
 - 현실적으로 유럽과 남미식 노조운동과 진보정치 방향 수립 필요

4. 노동정치 현황과 과제, 문제의식

〈현 황〉

- 1) 제1기 정치세력화 실패와 사분오열된 노동정치, 진보정치 세력
 - 국민모임,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노동정치연대, 계급정당추진위, 구)통합진보당 세력, (새로하나) 등
- 2) 독자적이고 단일한 정치방향을 정하기 어려운 민주노총
 - 진보정치의 다원화로 상당기간 통일된 정치방향을 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과 제〉

- 1) 분열된 진보정치 결집과 통합 본격 추진
 - 현재 진행되는 진보결집과 통합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진보정치 재편 추진
- 2) 노동정치세력의 통합 추진
 - 노·농·빈 함께 참여방안 마련(참고로 빈민은 국민모임에 조직적으로 참여함)
 - 가칭 노동정치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노동정치와 진보정치 재편과 결집을 위한 세력(현장조직 등)과 개인등으로 소통과 공동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 3) 대중조직차원의 가능한선에서의 정치방향 수립과 집행
 - 민주노총 차원의 공동의 정치방향 및 선거방향 수립, 이에 기초한 산별과 지역 본부의 진보정치 활동 진행

5. 2016년 총선대응

- 가능한 진보정치세력의 통합 추진하여 통합된 진보정당으로 총선대응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
- 총선을 통한 진보정치의 토대구축
 - 진보진영의 독자대응에 기초한 총선대응을 원칙으로 진행
 - ▶ 최대한 많은 지역 후보출마 조직
 - ▶ 가능한 지역구(전략지역) 및 비례후보 당선 전략
- 민주노총은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입장을 선거방침으로

<2014년 지방선거 교훈>

- 4+2지지 --> 진보정당 및 진보정치세력으로 지지의 범위를 정한 것은 긍정적 현실적으로 효과는 높지 않아, 실제로 진보교육감 선거로 집중하는 현상
- 정당투표에 대한 조직적지지 어려워

- 2016년 총선은

- ▶ 지역구는 진보진영 후보단일화 추진

▶ 정당투표는 전술적 선택 필요

--> 민주노총이 배타적지지 방침을 정하기 어렵다면 선거시마다 정당투표와 관련하여 특정 진보정당에 대한 선택적지지 고민필요

진보혁신과 결집,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한국정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절망만을 안겨주는 거대 보수양당을 넘어설 새로운 진보정치의 등장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화답해 지난 6월 4일 정의당,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노동당 대표들이 들었던 진보혁신과 결집을 통한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의 횃불을 더 높게 들고자 다시 모였습니다.

6월 4일 4자 대표들의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공동 선언’ 이후에도 박근혜 정권의 폭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막무가내 노동시장 개악, 남북 긴장 고조와 전쟁위기, 국민을 뜻을 저버린 정치개악 등 민생과 평화를 외면하고, 개혁을 개악으로 갈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제1야당은 이에 맞서 싸우기 보다는 번번이 끌려다니며 무능과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보수 정치에 맞선 진보정치의 역할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진보혁신과 결집을 통한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이라는 국민적 요청에 적극 부응하고자 지난 6월 4일에 있었던 4자 대표들의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공동 선언’에 입각하여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보다 강력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연연하는 보수정치를 대체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는 진보정치의 새 시대를 활짝 열어 가겠습니다.

1. 우리는 보수정치 독점구조의 혁파라는 시대적 소명에 답하고자 내외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진보정치 혁신과 결집을 통한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더욱 크고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4자 정무협의회를 확대하여 ‘진보혁신과 결집을 위한 연석회의(약칭 진보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정례적인 대표자협의, 집행책임자협의, 분과위원회와 지역-부문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모든 쟁점에 대해 열린 자세로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 우리는 진보혁신과 결집,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가급적 빠르게 논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9월 말까지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고 이에 기초해 통합선언과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추진기구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늦어도 11월초에는 노동자, 서민들에게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이라는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우리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저지, 비례대표 확대,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당면 현안에 대해 강력한 공동행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4자가 함께하는 지역순회 등을 통해 지역과 현장에서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의 흐름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4. 우리는 진보정치의 혁신과 성장을 염원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이 우리 사회의 진보적 변화를 바라는 모든 분들의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려놓고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정치의 근본적 변화를 바라는 세력과 개인, 특히 취업절벽에 막혀 갈 길을 잃은 청년과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들, 그리고 차별과 배제에 고통받는 모든 분들의 참여를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2015년 9월 2일

국민모임 대표 김세균, 노동정치연대 대표 양경규, 정의당 대표 심상정, 진보결집+ 대표 나경채

[발제 3] 백종성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현장정치특별위원장

2016년 총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들어가며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한국사회의 심각한 생존권 문제해결을 위하여 재벌사내유보금 환수운동을 벌여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준)을 제 세력과 함께 건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1월 창당을 앞두고, “자본주의를 넘어 사회주의를 향한 대안과 전략을 찾는다”를 주제로 3차례의 대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위는 아직 2016년 총선에 대한 구체적 대응계획을 의결한 상황은 아니며, 이 글은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 총선을 논하기 위한 전제 - 야권연대와 묻지마 통합론에 대한 반성

민주노동당은 스스로의 필요를 설득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에 실개천이 흐른다면,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사이에는 장강이 흐른다.”

통합진보당은 스스로의 정신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전태일 정신과 노무현 정신의 만남”

현 시기 ‘진보’라고 특정세력을 지칭할 때, 그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노동자 주도의 정치세력? 야권 이외의 대안세력? 아니다. 그것은 아주 모호한, 그래서 설명해주는 바가 거의 없는 그 무엇이다. 민주당조차 종종 스스로를 ‘진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가?

이는 기간 자연스럽게 행해진 ‘야권연대’의 결과다. 전직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민주당 집단 입당원서를 들고 안철수, 문재인 캠프로 뛰어들어도 민주노총 차원에서는 징계 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왔다. 전술적 유연함이라는 명분으로 자유주의 세력과의 연대 연합을 행해온 결과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진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 시기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문제를 논하기 위해, 또한 2016년 총선 대응을 계획하기 위해, 우리는 민주노동당으로 시작된 의회주의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귀결에 대해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분열’이 문제라고 한다면, 이미 통합진보당 자체가 ‘분열된 진보의 통합’이라는 목적에 근거하지 않았는가? 현 시기 ‘진보’의 분열이 문제라고 평가하는 것은 그야말로

현상적인 논의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운동에 대한 평가와 반성 없이, 2016년 총선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 을지로 위원회의 정치와 양날개론의 정치가 과연 다른가?

많은 투쟁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을지로 위원회에 현실적인 기대를 가진다. 그 과정을 통해서 민주노총 사업장의 조합원들이 민주당에 집단적으로 입당하기도 한다. 어쩌면 을지로위원회의 이런 작동은, 그간 진보정당의 의원실이 해왔던 역할을 더욱 많은 자원을 통해, 더욱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2010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점거하고 있는 국면에서의 '진보정치'의 작동과 질적인 차이가 없다.

즉, 아래로부터 자본과의 투쟁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힘을 형성하고, 그것이 다시 정치세력화의 자원이 되는 형태의 선순환구조가 아니라, 현장 외부의 '진보정당'이 국가-자본과의 계급갈등을 조율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왔다. 즉, 노동자 정치가 계급투쟁을 더욱 확장하는 정치가 아니라 그것을 국가-자본과 중재하고 조율하는 정치로서 존재한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존재기반을 허물 뿐이다.

이제 정당 상층에서 민주당과의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철도파업이 드러내듯 노동조합 차원에서 민주당과의 연대가 이루어진다. 이미 을지로위원회식 정치, 중재의 정치가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다. 계급투쟁은 어느새 소위원회의 문서더미 속에 파묻혀버린다.

심지어 그러한 사회적 합의구조를 더욱 잘만들수만 있다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논의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운위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양날개론이 근본적으로 반성되어야 함을 말한다.

○ 야권연대는 그만, 계급투쟁의 정치가 필요하다

노동계약 정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는 정부 입법시도의 성패와 무관하게 현장을 파고 들 것이다. 노동계약에 맞서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생존권적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노동자 정치의 역할은, 바로 다른 선택지가 가능성을 노동자계급 앞에 내보이며 투쟁을 조직하는 것에 있다.

즉, 총선이 '민주당과 연대하여', '법안을 무력화시키자'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한국사회는 근본적으로 개조되어야 하며, 민주당과의 연대를 통해서가 아니라 노동자계급 스스로 투쟁과 정치의 주체가 될 때 가능성을 실천적으로 설득해나가야 한다. 현재, 노동자계급추진위가 설정하고 있는 의제와 방향이 바로 재벌의 사회화다.

[발제 4] 권태훈 진보결집 + 공동대표

노동자 정치세력화 및 노동-진보진영의 2016년 총선 대응

1. 노동자 정치세력화

- 대의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진보정당일 것임. 이런 공감대 아래 1997년 이후 진보정당 운동이 진행되어왔음.
- 1997년 이후 진보정당 운동은 패권주의와 낡은 사상과 관행, 내부의 잘못된 정파적 대립과 민주적 소통과 운영의 부족 등으로 인해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임. 이런 상황은 진보정당에 대한 노동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진보정치에 대한 냉소가 만연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진보정당 운동에 대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함.
- 진보정당 분할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분명한 규명과 극복이 필요할 것임. 이를 전제로 할 때, 5~10%의 지지라는 취약한 기반에도 진보정당이 분할되어 있는 구도는 진보정당 자체의 성장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진보정당에 대한 신뢰 상실의 원인이 되어왔음. 따라서 진보정당이 안정적 성장경로에 접어들 때까지는 큰 틀에서 진보정치를 아우르는 진보결집이 진보정당에 대한 노동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임.
- 진보정당의 약화와 동시에 진행된 진보정당운동과 노동현장운동의 괴리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그나마 진행되던 노동조합의 정치사업은 중단되고, 노동자들은 노동자 정치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소로 가고 있음. 현장활동가들도 현장 노동자들의 정치적 냉소에 막혀 적극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 이는 노동자들의 정치의식 약화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진보정치의 약화와 보수정치의 강화에 기여하게 됨.

-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보정당운동 차원에서는 진보정치의 혁신과 결집이, 노동자운동 차원에서는 진보정당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적극적인 정치교육과 활동을 진행하고, 진보정치의 혁신과 결집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국민모임, 노동정치연대, 정의당, 진보결집+ 4단위가 진보혁신회의를 구성하고 진보정치 혁신과 결집,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관심과 개입을 요청함.

2. 2016년 총선 대응

- 2016년 총선은 2017년 대선의 전초전. 대선이라는 한국사회를 좌우할 권력의 향배를 결정하는 선거를 앞둔 전초전인 만큼 정치세력들 간의 사활을 건 대결이 벌어질 것임. 최근 선거제도 개편, 내부 혁신안 등을 둘러싼 보수정당들 내부의 권력투쟁은 공천권을 둘러싼 대립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줌. 여기에 김무성, 문재인이라는 대표적 대권주자들과 이들의 경쟁자들 사이의 복잡한 투쟁 또한 진행되고 있음.
- 노동자들에게 2016년 총선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후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 보수정치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반전을 위한 정치적 계기를 마련하는 선거가 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가능한 많은 수의 노동자, 노동자의 관점에 입각한 국회의원 당선이 필요. 이를 위해서는 진보정당과 노동자운동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 진보정당은 진보정치의 혁신과 결집을 통해 그동안 노동자들이 진보정당운동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게 만든 원인을 제거하고, 현장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현장노동자들이 참여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상활동과 선거활동을 계획해야 할 것임.
- 노동현장은 적극적으로 현장 정치활동과 교육을 강화하고, 노동자 후보를 발굴하며, 노동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의제화해야 할 것임.
- 무엇보다 진보정당과 노동자운동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공동활동이 중요함. 이를 위해 진보정당과 민노총이 공동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발제 5] 김형탁 정의당 부대표
<구두 발제>

[발제 6] 장원섭 공안탄압대책위 집행위원장
<구두발제>